

- ✓ 오늘 금융위원장 간담회
- ✓ 22일 DLF 제재 심의위
- ✓ 22일 신한銀 채용 선고
- ✓ 푸르덴셜 숏리스트 압박

설 앞둔 금융권 '폭풍전야'

금융권이 설 연휴를 앞두고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먼저 대규모 원금손실로 논란된 해외금리 연계 과생결합펀드(DLF)의 후폭풍이다. 향후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지배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오랜 재판 끝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2일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당초 DLF 제재심은 지난 16일에 이어 오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16일 1차 제재심에서 먼저 진행된 하나은행에 대한 심의가 길어지면서 우리은행 심의는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1차 제재심과 마찬가지로

지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직접 참석해 다시 한 번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앞서 손 회장과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우리금융은 물론 함 부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 중 한 명인 하나금융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손 회장의 경우 징계 결정 시기도 관심사다. 중징계 최종 결정이 손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는 3월 주주총회 이후일 경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전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이 힘들다. 차기 회장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는 함 부회장은 시기를 떠나 중징계를 받으면 회장 도전이 불가능해진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이와 함께 22일에는 서울동부지법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있던 당시 부정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달 임기 3년의 차기 대표이사 회장 단독 후보로 선정됐다. 당시 이만우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법적리스크와 관련해

"법적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얘기를 했고, 검토했다"며 "(채용비리사건)처음 시작된 작년에도 이사회 전반에서 리스크 관리와 컨틴전시 플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더라도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관련법이나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실형을 받은 사실은 형 집행이 끝난 후에 결정 사유로 작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3곳이 CEO들이 걸린 이슈에 집중하는 사이 KB금융지주는 푸르덴셜생명 인수합병(M&A)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금융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진행된 푸르덴셜생명 매각 예비입찰에 KB금융과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 프라이빗에쿼티(PE) 등이 인수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유력한 인수 후보 중 하나로 꼽혔던 우리금융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KB금융의 인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신한금융이 오픈라이프를 인수하면서 리딩뱅크 자리를 다진 만큼 KB금융이 푸르덴셜생명을 가져간다면 금융권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 매각주관사인 골드만삭스는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적극적인 수후보(숏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20일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은행장들과의 회동이 예정돼 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 정기이사회 이후 열리는 은행장 만찬에 참석한다. DLF 사태 관련 제재를 비롯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등 첨예한 이슈가 진행중인 만큼 어떤 논의가 오고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오늘부터 9억 주택보유자, 전세대출때 집 팔아야

고가주택·전세대출 양립 불가 위반 사항 적발시 대출금 회수

20일을 기해 12·16 부동산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시행된다. 핵심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전세대출이 양립 불가하다는 것이다. 고가주택을 사려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고, 전세대출을 계속 쓰려면 고가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전세대출 대책 세부 내용을 보면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

유자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어디서든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10·1 대책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공적 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이미 차단했다. 이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하게 되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

은행은 전세대출을 내줄 때 주택금융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들 보증 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것과 같다.

새 규제 적용 범위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20일 이후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 보유 사실이 적발되면 전세대출을 회수당한다. 새 규제 체계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 약정때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은행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에서 전세대출자의 보유 주택 수를 체크한다. 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기한이익 상실은

대출 회수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기한이익 상실되는 시점은 적발 후 2주 가량이 지난 시점이다.

2주 이내 상환하더라도 계약 위반이므로 향후 3년간 주택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고가주택 취득을 자진해서 알려도 마찬가지다. 9억원 넘는 고가주택을 상속받거나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유일하게 예외로 설정해 대출을 회수하지 않는다. 다만 만기 연장은 되지 않는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차주도 마찬가지다.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사들이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그 즉시 대출을 회수당하지는 않지만 만기연장은 되지 않는다. /정연우 기자 yw964@

롯데그룹 임직원 일동

※ 조화 및 조의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회비번호 02-7501-22631
02-7501-703231
02-7501-7028(홍보팀)

롯데그룹 장례위원장 황각규 송용덕

롯데그룹 임직원 일동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 (향년 99歲)께서 2020년 1월 19일 (음 12월 25일) 별세 하셨습니다. 영결식을 롯데그룹장으로 거행함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롯데그룹 葬 公 告

영결식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롯데콘서트홀(롯데월드몰 8층)

하 告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 (향년 99歲)께서 2020년 1월 19일 (음 12월 25일) 별세 하셨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부	신동주	신동빈
아	신영자	신유미
딸	신영자	신유미
며	조은주	시게미쓰 마나미

빈	시계미쓰 하츠코
소	신동주 신동빈
영	롯데콘서트홀(롯데월드몰 8층)
결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07시
식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07시